

1976년 5차 비동맹(בלקבלגדמ) 정상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

‘한반도 문제’ 안건과 결의안의 채택 과정을 중심으로

The 5th Non-Aligned Summit Conference(1976) and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김도민¹⁾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76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5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한반도 문제’ 안건과 결의안의 채택 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1975년 리마 외상회의에서 비동맹 가입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가입 외교전은 일단락됐으나, 1976년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선언과 결의안이 채택되느냐를 둘러싸고 남북한은 다시 한번 격돌했다. 북한은 1976년 들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북침 준비로 인한 ‘새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콜롬보 정상회의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경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고자 했으며 남한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제출한 한반도 관련 정치 선언 조문과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채택된 결의안에 유보를 표한 비동맹 회원국이 약 30퍼센트에 달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비동맹그룹의 단결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콜롬보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 강경한 내용을 담아 제출했던 31차 유엔총회 결의안을 철회해야만 했다.

핵심어 비동맹(בלקבלגדמ), 남북한 외교경쟁, 한반도 문제, 유엔총회, 글로벌 사우스

- 차례**
1. 서론
 2. 정상회의 의제 채택 문제와 남북한의 초안 경쟁
 3. 정상회의 개막과 ‘한반도 문제’ 안건을 둘러싼 외교 경쟁
 4. 「콜롬보 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평가
 5. 맺음말

1. 서론

본고는 1976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5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처음으로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 남북한 외교경쟁의 핵심이었던 ‘한반도 문제’의 안건 상정과 결의안 채택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냉전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며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처음 열렸던 비동맹(non-alignment)¹⁾ 정상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었다.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2차 정상회의가 열렸으나 기존의 비동맹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국문사전편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CKD-1230004).

심사자들의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논평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고에는 시간상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반드시 명심할 것이다.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조교수

1) 넬알라인먼트(non-alignment)는 남한에서는 비동맹, 북한에서는 벨릭블가담으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본고에서는 우리 학계에서 통용되는 비동맹을 사용하되, 북한 관련한 부분에서는 벨릭블가담을 쓰기도 했다.

을 주도해온 국가들의 혼란과 주역들의 사망 및 실각으로 1970년에야 3차 정상회의가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1970년 전후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의 화해라는 긴장완화(데탕트)를 경유하며, 지구적 냉전은 양극적 대립이 완화됨으로써 힘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된 비동맹 회의는 제3세계 국가들이 세를 결집하는 국제회의로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중반은 1960년대 내내 아프리카 신생국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비동맹 회원국들이 증대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의 철수와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비동맹 회의는 급진적인 세력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개됐다. 특히 1973년 열린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는 비동맹 내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이며 친북적인 알제리에서 개최됐는데, 이때 채택된 「알제 선언」에는 북한이 주장해 온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게다가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남북한은 모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북한만 가입에 성공했다.

이처럼 1970년대 초중반 비동맹회의는 국제정치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은 1975년 그 절정에 달했다. 관련하여 최근 연구들이 진척됨으로써 1975년까지 남북한의 비동맹을 둘러싼 외교경쟁의 구체적인 양상은 밝혀진 바 있다.² 그런데 1975년 비동맹 가입 외교전(戰)을 기점으로 남북한의 외교경쟁은 일단락되었으나, 끝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듬해(1976년) 열리는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선구적으로 홍석률은 『분단의 히스테리』에

2 1970년부터 1975년 시기까지 비동맹의 역사와 남북한의 외교경쟁 양상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한국의 가입신청 문제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2023; 김도민 「1970~75년 북한의 불력불가담(non-alignment) 인식과 활동: 불력불가담 회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6(3),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3.

서 북한이 1976년 열린 비동맹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전개했다는 사실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³ 또한 임상순은 1970년대 북한의 제3세계 외교를 다루면서 “1976년 8월 콜롬보회담”부터 “내부갈등이 표면화”됐으며, 특히 8월 18일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군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으로 북한의 “제3세계와의 공조가 상당히 악화”됐음을 지적했다.⁴ 이러한 연구들은 1975년까지 남북한의 외교경쟁의 양상을 다루었으며, 또한 북한의 5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⁵

이에 본고는 1976년 비동맹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입국 북한이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고자 하는 과정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남한의 외교경쟁의 전개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일한 콜롬보 선언문을 둘러싸고 남북한 정부가 상이한 평가를 내린 이유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역사적 실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주로 남한 외교부 외교사료관이 제공하는 외교사료와 북한의 공식문헌(『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그리고 우드로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사회주의권 외교문서를 활용했다.⁶

3 이 책은 1976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철폐,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고자 “비동맹회의,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했음을 언급했다. 특히 이 책은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판문점도끼살해 사건」이 “콜롬보회의의 그 자체에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북한의 비동맹외교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380~383쪽.

4 임상순, 「제3세계·유엔외교의 목표와 전략」, 서보혁·이창희·차승주 편,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선인, 2015, 260~263쪽.

5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북한과 비동맹운동 관련 연구가 최근 제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rkhoff, Nate, “North Korea and the Non-Aligned Movement: From Adulation to Marginalization”,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8 Issue 1, 2021, p.41~71. 다만 시간 제약상 이를 연구사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임을 다짐한다.

6 대한민국 외교사료관은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https://opendiplomaticarchives.mofa.go.kr/usr/main/main.do)을 통해 누구나 공개된 외교사료를 신청하여 피디에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https://digitalarchive.

본 연구 대상은 최근 국내 학계가 주목하며 많은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관련해서도 그 전사(前史)로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리가 기대한다.⁷ 또한 북한사의 맥락에서 정부 수립 직후부터 세계 민족해방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비(非)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해온 북한 지도부가, 1970년대 중반 시점에서 ‘탈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단(통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⁸

2. 정상회의 의제 채택 문제와 남북한의 초안 경쟁

1975년 비동맹 가입에 성공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76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외교전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그는 “빨리불가담운동에 뿔뿔이 참가”하고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우리측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더 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망했

wilsoncenter.org/)에서 사회주의권에서 생산한 외교문서를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s://unibook.unikorea.go.kr/>)는 북한 신문 기사 제목 검색을 제공한다. 다만 폐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원문의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년감』을 확인 가능하다.

7 김태균, 『반동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진인진, 2023; 이상우·정영철, 「축전외교를 통해서 본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 『현대북한연구』 27(2),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4; 최규빈, 「북한의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와 제3차 개발도상국 정상회의 참가배경과 함의: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적 활용」, 통일연구원, 2024; 최웅환,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 배경과 전망」, 『이슈브리프』 54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8 한국전쟁 시기 미국이 북한에서 노획한(Captured) 문서에서 잘 드러나듯이, 북한 지도부는 정부 수립 전인 1947년부터 인도네시아 민족해방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족해방운동: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강연자료」(1947),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9 I,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탈컬렉션 해외한국관련자료.

다.⁹ 한편 비동맹 가입에 실패하고, 북한이 지지하는 한반도 결의안이 30차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1975년 12월,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여, 외무장관을 주유엔대사 김동조로 교체했다.¹⁰ 그리고 남한과 핵심 우방국들은 전략회의를 진행하여 “남북한간의 유엔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대결을 피하고 한국문제를 「7.4 공동성명」에 입각, 남북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¹¹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탈(脫)유엔화’ 정책은 역설적으로 북한과 외교대결의 무대가 비동맹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낳았다.¹²

1975년 12월,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올릴 의제(agenda) 작성을 위해 뉴욕의 주유엔 알제리 대표부에서 대사급 비동맹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 위원회는 14개 항목을 담은 의제안을 작성하여 전체 비동맹 회원국에 배포하여 각회원국의 의견 및 제안을 타진했다. 이때 배포된 의제안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¹³ 그런데 1976년 1월 14일, 주유엔알제리 대표부는 북한 정부가 콜롬보 정상회담의 의제초안(draft agenda)에 ‘한반도 문제(Korean Question)’를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리는 회람공한(No.AB/ma/837/76)을 뉴욕의 상주 조정위원회 대표부들에게 발송했다.¹⁴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비동맹 정상회의 의제에

9 김일성 「신년사」(1976.1.1), 『조선중앙년감(1977년판)』, 2쪽.

10 주유엔대사를 맡고 있던 김동조가 외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11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202쪽.

12 이시영은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과의 대결이 없어진 대신 비동맹으로 무대가 옮겨갔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비동맹 대책을 세우고 수행하는데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시영(전 주UN대사), 『한국 외교와 외교관』(외교사연구소 오벌히스토리 총서 4), 역사공간, 2015, 135쪽.

13 문서명: 「제5차 비동맹 정상회담 개최 준비 동향」(생산일: 1976.1), 생산과: 국제연합과, 문서철명: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V.1 기본대책 1: 1-5월)』, 공개년도: 2007(이하 “문서명(생산일), 외교사료관, 문서철명”으로 표기).

14 「PERANENT MISSION OF ALGERIA TO THE UNITED NATIONS」(New York, January 14, 1976)(No. AB/ma/837/76),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1권; 「제5차 비동맹 정상회담 개최 준비 동향」(1976.1),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1권.

포함시키려고 하자, 남한 외무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1월 24일, 외무부 장관은 주유엔 대표부와 8개국(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페루, 라이베리아, 자이레, 쿠웨이트) 주재 대사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은 “비동맹 결의가 아니라 남북대화에 의해서만 해결가능한 것”이며 “한국문제가 포함될 경우 당사자인 남한도 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주어여야 함을 설득” 하라고 지시했다.¹⁵

1976년 2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사급 비동맹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의됐다. 페루가 북한이 요청한 사항을 언급하며 몇 나라들의 동의(agreement)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가이아나는 “한반도 문제(QUESTION OF KOREA)”라는 제목 대신 “한반도 통일(UNIFICATION OF KOREA)”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으나, 인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가 “좀더 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명칭”이자 “유엔의 관례에 따라” ‘한반도 문제’라는 제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재차 반대가 없자, 조정위는 최종적으로 ‘국제정세와 비동맹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검토 및 평가(GENERAL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AND ROLE OF NON-ALIGNMENT WITH SPECIAL REFERENCT TO)’라는 초안 의제의 10개 하위항목(SUB-ITEM) 중 하나로 ‘한반도 문제’라는 제목으로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¹⁷

1976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외상들이 모이는 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조정위원회 구성국은 아니지만 북한도 비동맹 회원국으로서

옵서버로 참석했다.¹⁸ 조정위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976년 5월 29일, 김일성 주석은 유고슬라비아 기자에게 한 답변에서 “빨리불가담나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널리 폭로하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여론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켜줄 것을 희망” 했다.¹⁹

5월 31일 열린 조정위원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말리가 작성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수정 초안이 상정됐다. 이에 말레이시아의 유보 발언이 있었으나 채택됐다. 결국 6월 2일 열린 조정위원회 본회의(PLENARY)에서 최종선언문이 발표됐는데 말리의 수정안이 다음과 같이 그대로 담겼다.²⁰

비동맹 조정위원회는 1972.7.4. 남북공동성명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민 자신에 의한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민족 대단결에 입각, 여하한 외세 간섭도 없이 한반도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본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긴장과 새로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외국군사 기지를 해체하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유엔 기발하 남한 주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확인한다.²¹ (밑줄은 인용자)

15 「제5차 비동맹 정상회담 개최 준비 동향」(1976.1),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 1권.

16 「주말레이시아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2.20) 생산과: 국제연합과, 문서철명: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6.5.30~6.3』, 공개년도: 2007(이하 “문서명(생산일), 외교사료관, 비동맹조정위원회 외상회의”로 표기). 「주유엔대사대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2.11), 위의 자료.

17 「주유엔대사대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2.11),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 1권.

18 주유엔남한 대사는 북한은 “강력한 대표단(주유엔 북괴 의원도 포함)”을 파견하여 “옵서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위 대표나 다름없는 맹렬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장관에게 보고했다. 「주국련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6.8), 외교사료관, 비동맹조정위원회 외상회의.

19 김일성, 「유고슬라비아 따누그통신사 대외편집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6.5.29), 『김일성 저작집 31(1976.1~1976.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0 「주국련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6.8), 외교사료관, 비동맹조정위원회 외상회의.

21 「(외무부장관이 대통령각하에게 보내는 보고사항) 제목: 비동맹조정위 외상회의 관련 제2차 보고」(1976), 위의 자료.

이번 조정위 선언문에는 그동안 채택된 한반도 관련 비동맹 회의 문건들과 다르게,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외국군사 기지를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1950년대부터 줄곧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는 1970년부터 미국이 새 전쟁 준비를 위해 “각종 핵무기를” “비무장지대 가까이 배치하는” “새로운 군사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²² 특히 1974년 하반기부터 북한 지도부는 “미제침략군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며 국제 여론과 자신들의 주장을 더 자주 『로동신문』에 내보냈다.²³ 이처럼 1975년 비동맹에 가입한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남한에서 미군철수에 더해 남한 외무부의 분석처럼 “주한미군 핵무기 시설(핵기지)과 관련 이의 해체를 위한 비동맹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새 전쟁’과 ‘외군기지 해체’를 새롭게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²⁴

22 『로동신문』에 비무장지대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비판하는 보도는 1970년 4월 2일자에 처음으로 실린 것으로 확인된다.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한(미제침략자들이 최근에도 여전히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이며 그것들을 비무장지대 가까이 배치하는 한편 새로운 군사적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 조선 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수석위원 조선 인민군 소장 리춘선)」, 『로동신문』, 1970.04.02, 3면.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미제의 행동을 엄중한 범죄행위로 단호히 규탄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1974.12.21, 2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정전후 지난 22년간 감행한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역사적으로, 전면적으로 폭로규탄, 미제침략자들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군사정전위원회 제366차회의에서)」, 『로동신문』, 1975.07.31, 5면; 「미제침략군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76.02.29, 5면; 「《미제는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남조선괴뢰도당파적폭압책동을 규탄한다》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강력한 반미반괴뢰시위 진행」, 『로동신문』, 1976.04.13, 5면.

24 이러한 해석은 당시 남한 외무부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도 확인된다. 또한 외무부는 “비동맹 국가들의 외국군사 기지에 대한 일반적 거부 반응을 의식, 이에 영합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외무부장관이 대통령각하에게 보내는 보고서항) 제목: 비동맹조정위 외상회의의 관련 제2차 보고」

알제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기초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최국 스리랑카가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1976년 6월 29일, 주유엔스리랑카 대표부는 자국이 작성한 비동맹 정상회의의 초안을 유엔주재 비동맹회원국 대표부에 배포하고, 이 초안에 대한 논평(comment)을 7월 15일까지, 콜롬보 또는 유엔 주재 스리랑카 대표부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²⁵ 스리랑카가 기초한 정치선언 초안 중 한반도 관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인도차이나 그리고 베트남(Korea, Indochina and Vietnam)

회의는 남한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외군군대 기지의 폐쇄, 유엔군사령부의 종료 그리고 한반도 군사정전협정의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요구한다.

회의는 북과 남이 평화롭게 그리고 “1972년 7월 4일의 북-남공동선언”에 규정된 세 원칙에 기초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영토를 통일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²⁶

이 스리랑카의 초안에 대해 남한은 내용을 “중화”시키기 위해, 북한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자 외교력을 동원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1976년 7월 1일,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윌슨(WILSON) 고문이 남한 대표부를 방문하고 콜롬보 정상회의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윌슨은 한반도 관련 부분을 보다 “중화 내지 수정시키는 효과적 방안의 하나로” “하나의 대안을 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스리랑카측이 7월 15일까지 비동맹 각국의 코멘트를 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핵심그룹(CORE GROUP)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1976.6.4), 외교사료관, 비동맹조정위원회 외상회의.

25 「장관이 22개 재외공관에 보내는 전문」(1976.7.1),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2권.

26 「FIF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COLOMBO 16-19THE, AUGUST 1976, DRAFT POLITICAL DECLARATION」, 위의 자료.

협의”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²⁷ 1976년 7월 21일, 미국이 제안한 “10개국 핵심 우방국 전략회의에서는” 비동맹 “교섭국가를 할당” 하여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교섭이 시행됐다.²⁸

북한은 「스리랑카측이 작성한 제5차 비동맹국가 정상회담의 정치선언초안과 경제선언초안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를 직접 제출했다. 이 북한의 공한은 정치선언 관련하여 11개 항과 경제초안 관련 3개 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북한은 정치선언 초안 중 한반도 문제를 인도차이나와 베트남 문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의제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회의에 북한이 이미 제출한 결의안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미제국주의자들은 큰나라와의 관계는 증진하면서 작은나라들은 각개격파(one by one)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²⁹

3. 정상회의 개막과 ‘한반도 문제’ 안건을 둘러싼 외교경쟁

1976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콜롬보에서 정상회의에 앞서 대사급 조정위원회 회의와 전체 외상회의가 열렸다. 8월 9일, 허담 부수상 및 외상을 포함한 북한 비동맹회의 대표단 120명이 승선한 만경봉호가 스리랑카 콜롬보항에 입항했다.³⁰ 콜롬보에 도착한 북한의 허담 외상은 기

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 발발을 위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³¹

8월 9일 열린 조정위원회 대사급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11일부터 열리는 외상회의에 제출하는 단독 명의 한반도 문제 관련 결의안 및 정치선언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³² 8월 11일 외상회의가 열리는 첫날, 회의장은 초대된 대표들 이외에는 출입이 완전히 차단됐다. 참석한 허담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켜 쟁점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북한 대표단 전체는 회의장과 각 호텔에서 참가 대표들과 대대적인 개별 접촉을 전개했다. 주유엔 남한대사는 이번 회의가 온건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북한의 일방적인 분위기에 압도”된 상황에서 “남한 입장을 대변하기로 한 국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위기’의 상황을 장관에게 전했다. 주유엔 남한대사는 미국도 “당초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었으나 북한의 “초강경 내용의 결의안에 너무나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³³

1976년 11일부터 진행된 외상회의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는 외상회의 내내 논의되지 못하다가 14일 야간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치선언 및 결의안이 소개되고 10개국 기초위원회(DRAFT COMMITTEE)에 회부하는 긴급동의안이 제안됐다. 이에 페루의 실바(SILVA) 대사가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서는 안되며 정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여야 한다고 반대 발언을 했다. 라이베리아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자, 일단 북한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은 정지됐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8월 16

27 「(긴급) 주국련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7.2), 위의 자료.

28 「장관이 재외공관에 보내는 전문」(1976.7.26), 위의 자료; 「(외무부장관이 대통령각하에게 보내는 외무부보고) 제목: 제5차비동맹정상회담 대책 시행에 관한 보고(제1차)」(1976.7.20), 위의 자료.

29 「스리랑카측이 작성한 제5차 비동맹국가 정상회담의 정치선언초안과 경제선언초안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Sugges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raft Political Declaration and the Draft Economic Declaration of the Fif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Prepared by the Sri Lanka Side)(1976.7),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3권.

30 「II. 북괴동향」(미상), 위의 자료.

31 「외무부장관이 대통령각하에게 보내는 외무부 보고사항」 제목: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한국문제와의 경과에 관한 중간보고」(1976.8.20),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4권.

32 「(긴급) 주콜롬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11),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3권; 「주콜롬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11), 위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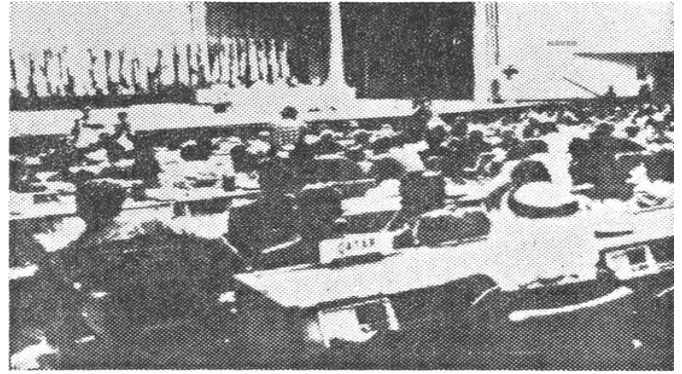
33 「국련과장이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11), 위의 자료.

일부터 다시 속개되는 정치위원회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됐다.³⁴

한편, 8월 14일 오후에 아프리카 5개국(중앙아, 가봉, 모로코, 자이레, 감비아)은 스리랑카측 정치선언 초안 중 한반도 관계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프리카 5개국 초안은 남한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수정 문안과 동일한 것이었다.³⁵ “5개국 수정안은 8월 15일자로 공식문서로 배포됐다.”³⁶ 이로써 외상회의는 주최국 스리랑카가 작성한 초안과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 5개국의 개정안이라는 한반도 문제 관련 총 ‘3개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종료됐다.

1976년 8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반다라나이케 기념 국제회의장(Bandaranaik Memorial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에서 개최됐다. 86개 회원국과 9개 옵서버국, 13개 옵서버 단체, 그리고 7개 게스트 국가 등이 참석했다.³⁷ 특히 86개 회원국중 약 40개 국가의 정부원수 또는 수상이 참석했다. 회원국인 북한 대표단(단장 정무원 총리 박성철)은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인 14일 오후 콜롬보에 도착해 있었다.³⁸

콜롬보 정상회의 개막일(16일), 유엔총회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24개국이 공동발의한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결의안이 제출됐다.³⁹ 이번 공동결의안의 제출 시기는 작년 30차(1975년 8월 7일) 때보



〈그림 1〉 비동맹 정상회의 직전 콜롬보 반다라나이케국제회의관에서 열린 외상회의의 장면(출처: 『경향신문』, 1976.8.12, 1면)



〈그림 2〉 5차 비동맹 정상회의 장소인 반다라나이케국제회의관을 형상화한 우표 (출처: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878364382258838&id=114532775308673&set=a.868237063271570&locale=el_GR)

다 1주일 정도 늦었으며, 제작년 29차(1974년 9월 16일)보다 한달 빠른 것이었다. 그리고 올해 공동결의안의 명칭에서 처음으로 “조선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제거”라는 문구가 제시됐다. 앞선 결의안 제목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29차)와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30차)였다.⁴⁰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비동맹 정상회의 개막일에 유엔총회에 한반도에서의 ‘극도로 침체화’하는 ‘긴장상태와 새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는 공동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호의적인 국제여론을 결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16일 개회식과 주최국 스리랑카 총리의 개막 연설 이

34 「(긴급) 주스리랑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15), 위의 자료. 130쪽; 「(긴급) 장관이 주유엔대사에게 보내는 전문」(1976.8.15), 위의 자료.

35 「(긴급) 주콜롬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15), 위의 자료.

36 「주요정세」(1976.8), 위의 자료.

37 「Letter dated 1 September 197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ri Lank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Symbol: A/31/197), pp.9~10. 유엔디지털라이브.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53922?ln=en&v=pdf>

38 『로동신문』, 1976.8.16, 2면.

39 『로동신문』, 1976.08.19, 1면.

40 『로동신문』, 1974.09.19, 1면. 『로동신문』, 1975.08.11, 1면.

41 이른 시기인 1976년 2월 13일, 남한 외무부는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문제 관련 단독 결의안’을 처음으로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고 동시에 이를 곧바로 31차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제5차 비동맹정상회담 관련 복귀책동과 정부 기본 방침」(1976.2.13),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1권.

후, 잠비아 대통령, 키프로스 대통령, 파나마 정부수반, 남베트남 총리⁴² 등이 축하 연설을 이어갔다.⁴³ 16일 오후, 다시 열린 정치위원회에서 이미 제출된 한반도 문제에 관한 3개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페루 실바 대표가 주콜롬보 남한대사에게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발언으로 시작되어 많은 국가의 찬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발언은 17개국(남예멘, 캄보디아, 말리, 카프베르데, 산토메, 애급, 적도기니, 잠비아, 모잠비크, 베닌, 콩고, 마다가스카르, 알제리, 쿠바, PLO, 월남, 유고)이 했으며, 아프리카 5개국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8개국(자이레, 중앙아, 사우디, 라이베리아, 모로코, 페루, 시에라레온)이 지지 발언을 했다. 그리고 실바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언은 하되 전체적으로 남한 입장을 옹호한 국가는” “8개국(요르단, 쿠웨이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모리타니아, 인도네시아, 튀니시아)”이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는 정치위원회에서 5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토의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8월 16일 밤, 3개안 전체가 다시 초안위원회에 회부됐다.⁴⁴

정상회의 둘째 날인 17일, 북한 대표단 단장 박성철이 기초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분계선일대에 완전전투준비를 갖춘 40만명의 군대를 배치” 했으며,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핵무기는” “1천여발에 달하며 그중 많은 것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전쟁도발책동이 당장 중지되고 남조선에 반입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쟁수단들이 제거되어야 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

가 철거하고 외국군사기지들이 철폐되어야 하며 조선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⁵ 8월 18일, 외교부장 허담도 콜롬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우리나라 정세가 매우 긴장” 상황이며 일촉즉발의 전쟁 발발의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⁴⁶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1976년 8월 5일 정부 성명 및 비망록 발표, 16일 제출한 유엔총회 결의안 제출에서 제시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내세우며,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미국이 남한으로 핵무기를 도입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데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런데 8월 18일 오전, 관문점에서 북한군이 미군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⁴⁷ 주싱가폴 남한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정상회의에서 긴급 발언권을 요청하고 “평양이 비상 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 했으나 “회의 관례에 반하여 아무 대표도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⁴⁸ 그리고 같은 날 야간에 열린 기초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날 회의로 또다시 넘어갔다. 주콜롬보 남한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논란이 많았으며, 북한이 고전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 시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친한(親韓) 온건국가들에 대한 선물 공세 등 회유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장관에게 보고했다.⁴⁹

8월 19일 오전 재개된 기초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 주콜롬보 남한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주로 스리랑카가 제시한 정치선언 초안과 북한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국 대표들의 찬반 발언이 진행됐다. 9개국(페루, 라

42 1974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사이공을 점령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곧바로 통일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채, 남베트남에는 “공산월남”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1976년 이 시점에도 공산화된 남베트남 총리가 콜롬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남북월통일 최소한 5년」, 『경향신문』, 1975.05.31, 3면.

43 정상회의의 진행 경과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했다. 『로동신문』, 1976.08.18, 1면; 『로동신문』, 1976.08.19, 1면. 「주요정세」(1976.8),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3권.

44 「주콜롬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16),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4권.

45 「제5차뻬력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정무원 총리 박성철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76.08.19, 2면; 「외무부장관이 대통령각하에게 보내는 외무부 보고서(향) 제목: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한국문제와의 경과에 관한 중간보고」(1976.8.20),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의 4권.

46 『로동신문』, 1976.08.20, 3면.

47 관련 내용은 홍석률, 앞의 책, 380~395쪽을 참고.

48 「주싱가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30),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49 「주콜롬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19), 위의 자료.

이베리아, 요르단, 모로코, 스리랑카, 사우디, 시에라레온, 인도, 아르헨티나)은 북한측 개정안 1항(전쟁도발행위 중지 및 핵무기 철수 등 관계)을 수락할 수 없으며, 그리고 2항(외군철수 및 평화협정 등 관계)은 아프리카 5개국의 개정안에 제시된 2항(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철군 및 유엔사 해체 등 관계)의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4개국(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쿠바, 북한)은 북한이 제시한 개정안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기초위원회는 스리랑카와 북한이 오전 회의의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치선언 초안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오후에 속개될 초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결정했다.⁵⁰

최종적으로 8월 19일 오후 재개된 초안위원회 회의는, 북한이 제안한 정치선언 수정안 초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정치선언문에 포함시켰다.

XIV. 한반도(KOREA)

102. 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이 조성한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도발하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이 이 지역에 도입한 핵무기, 군사 시설 및 기타 모든 전쟁 수단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03. 회의에서는 남한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외국 군사 기지의 폐쇄, “유엔군 사령부”의 종료, 그리고 한반도 군사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104. 회의에서는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 규정된 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남북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밑줄은 인용자)⁵¹

50 위의 자료.

51 「Letter dated 1 September 197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ri Lank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Symbol: A/31/197), p.30. 유엔디지털아카이브.https://

위 인용문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북한이 제시한 수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이다. 즉 북한 수정안에 등장했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세 문구인 “남한으로부터(from South Korea.)”가 “그들이 이 지역에 도입한(they have introduced in the area.)”로 수정됐을 뿐,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채택됐다.⁵² 특히 스리랑카측이 처음 제출한 초안에는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베트남이 하나의 항목 하에 서술되었으나, 이것도 북한이 요구한 대로, 한반도만 따로 14항으로 분리 서술됐다.

또한 북한이 단독으로 제출했던 「한반도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The Question of Korea: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도 콜롬보 정상회의의 ‘정치 결의안(Political Resolutions)의 19번 한반도 문제(Question of Korea)’(결의안 번호: NAC/CONF.5/S/RES.19)로 그대로 채택됐다.⁵³

1976년 8월 20일 새벽, 제5차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의는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경제선언(Economic Declaration)」 「경제협력을 위한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me for Economic Co-operation)」 「정치 및 경제 결의안(Political and economic resolutions): A.정치 결의안(1-20호), B.경제 결의안(21-32호)」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콜롬보 선언」을 채택하고 4일간 회의를 종료했다. 정치선언에는 “프랑스 및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금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제무기금수 조치” “세계군축회의 개최” “인

digitallibrary.un.org/record/153922?ln=en&v=pdf

52 「정상회담 채택 정치선언중 한국관계 조항」,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4권; 「외무부장관이 대통령각하에게 보내는 외무부 보고사항」 제목: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한국문제토의 경과에 관한 중간보고 (1976.8.20), 위의 자료; 「(긴급) 주코롬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1976.8.20), 위의 자료.

53 「한반도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The Question of Korea: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위의 자료; 「Letter dated 1 September 197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ri Lank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Symbol: A/31/197), pp.138~139. 유엔디지털아카이브.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53922?ln=en&v=pdf

도양의 모든 외국군사기지의 폐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다음 정상회의를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⁵⁴

4. 「콜롬보 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평가

북한 『로동신문』은 정상회의가 폐막한 바로 다음날인 21일자 1면에 “제5차빨리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을 알릴과 동시에 비동맹 정상회의가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회의에서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 등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긴장상태가 날로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리며, 한반도 문제가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력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라고 해석했다.⁵⁵ 또한 『로동신문』은 8월 22일자 신문 1면에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의 전문을 게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됐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지도부는 ‘만장일치’에 근거하여 비동맹 국가들이 자국을 강력히 지지하며 앞으로 공동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다.⁵⁶

반면, 남한 외무부는 이번 콜롬보 비동맹 회의는 이전까지와 달리 북한의 외교공세를 저지한 ‘한국의 승리’로서 평가했다. 1976년 8월 20일, 남한의 외무부 장관은 콜롬보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첫째, “당초 북한은 김일성

이 직접 참석하려 했으나 좌절됐다.”⁵⁷ 둘째, “북한은 비동맹운동의 지도국으로 격상시키고자 비동맹조정위원국에 피선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했다.”⁵⁸ 셋째, “한국문제 토의과정에서 종래와 달리” 남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강력한 발언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특히 “종래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아프리카 5개국이 공동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넷째,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는 정치선언과 관련”하여, “특히 북괴측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해졌음은 북괴가 최근 허위선전하고 있는 북침 운운에 대하여는 비동맹 그룹 자체 내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⁵⁹ 다섯째, “북괴가 제출한 별도 결의안”은 “비동맹의장국인 스리랑카를 포함한 19개국이 아국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동시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북괴가 그들 결의안 자체를 금추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비동맹 결의안으로서 채택된 것으로 악용하는데 결정적인 쐼지를 막은 것으로 사료”된다.⁶⁰

또한 비동맹 국가에 주재하는 남한의 재외공관도 대체로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실패”했다는 현지의 평가를 장관에게 보고했다.⁶¹ 특히 8월 22일, 쿠웨이트 외무장관 특별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괴는 거만한 태도와 극

57 김일성 주석의 불참이 ‘좌절’인지 정책적 ‘선택’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58 콜롬보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북한이 비동맹조정위원국에 피선되고자 시도했으며 이번엔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1979년 제6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은 조정위원국으로 피선이 됐으며, 남한 외무부는 이것이 5차 정상회의에서 서로 순번을 정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조정위원국에 선출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실패’일지 베트남과의 ‘합의’에 따른 ‘양보’일지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59 실제 수정된 것은 영문 세 단어인 “남한으로부터”에 불과하고 북한이 제시한 한반도 전쟁 위기의 문구가 그대로 실렸기 때문에 외무장관의 이 주장은 사실과 어긋난다.

60 「외무부장관이 대통령각하에게 보내는 외무부 보고서(상) 제목: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한국문제토의 경과에 관한 중간보고」(1976.8.20), 외교사료관,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 4권.

61 「주인도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25), 위의 자료; 「주불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25), 위의 자료; 「주싱가폴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30), 위의 자료; 「주인니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76.8.31), 위의 자료.

54 「콜롬보선언을 채택」, 『경향신문』, 1976.8.20, 3면; 「Letter dated 1 September 197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ri Lank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Symbol: A/31/197), pp.9~164. 유엔디지털라이브.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53922?ln=en&v=pdf>

55 『로동신문』, 1976.08.21, 1면.

56 『로동신문』, 1976.08.22, 1면.

단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므로 종전에 북괴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호의적 자세를 취하던 나라들이 ‘반감’ 또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음이 역력히 나타났”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괴는 오히려 실패하였고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승리’라고 판단”한다 평가했다고 한다.⁶²

이렇게 동일한 콜롬보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남북한은 각자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한의 주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북한이 제출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부분이었다. 북한 『로동신문』과 남한의 외무부 장관 모두 이 결의안의 결과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對)콜롬보 비동맹외교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일까?

비동맹회의 선언문 및 결의문 등의 채택 방식은 유엔 총회 같은 국제회의가 채택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컨센서스(Consensus), 즉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택된 선언문과 결의안은 모두 컨센서스에 도달했기 때문에 만장일치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비동맹 정상회의는 컨센서스에 이르러 채택된 결의안이라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회원국은 유보(reservation) 발언을 하고 이를 최종문서에 표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콜롬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단독 제출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남한 외무부의 정보에 따르면 회의 동안에 유보를 밝힌 회원국만 20여 국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의 최종 문서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유보국으로 명기된 국가는 25개국에 달했다.⁶³ 이는 유보발언국이 콜

롬보 비동맹 정상회의에 참여한 86개 회원국 중 거의 30 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컨센서스에 도달하여 채택됐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대로 만장일치라고 부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보국이 3분의 1에 달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비동맹 그룹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결의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실 북한 지도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은 콜롬보 정상회의 종료 직후인 8월 21일과 22일에는 북한이 제출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음을 여러번 그리고 기사 제목에도 헤드라인으로 내세울 정도였다. 그런데 8월 24일자 사설 「빨리 불가담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은 콜롬보 회의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자세히 소개하면서도 ‘만장일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설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빨리불가담운동을 파괴하려고 하면서 빨리불가담나라들을 분렬리간시켜 하나하나 격파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콜롬보수뇌자회의를 “앞두고 빨리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분렬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비동맹의 분열을 강조함으로써 자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어려웠음을 항변하는 듯하다.⁶⁴

이처럼 1976년 내내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강조하며 그 원인은 북침 준비를 완료한 미군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에 대한 국제여

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유보국은, 주최국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25개국(아르헨티나, 바레인,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가봉, 감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이보리코스트, 요르단, 케냐, 라이베리아, 몰디브, 모리타니아, 모로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시에라레온, 스리랑카, 리엔티, 튀니시아, 자이레, 말레이시아, 페루)으로 확정됐다. 「장관이 주유엔대사에게 보내는 전문」(1976.9.2), 위의 자료; 「장관이 주콜롬보대사에게 보내는 전문」(1976.12.23), 위의 자료.

62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비동맹 및 유엔 정책에 관한 면담록 송부」(1976.8.23), 위의 자료.

63 1976년 9월 2일, 남한 외무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계국가의 유보사실”은 “공식문서화하여” “정치선언의 부록으로서 선언 말미에 수록하기로 결정”됐으며, 이 공식 문서에는 “한국문제에 관하여” “23개국이 유보를 행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확인을 거쳐 「한반도 문제

64 『로동신문』 1976.08.24, 1면. 이후 로동신문 기사에서도 ‘만장일치 채택’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월 29일자 『로동신문』의 “월간 국제정세 개관” 기사에서도 만장일치는 언급되지 않고 “빨리불가담나라들의 확고한 립장과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고만 서술했다. 『로동신문』, 1976.08.29, 6면.

론을 강화하고자 비동맹외교를 전개했으며 스스로 제출한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 유보를 25개국이 표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목표로 한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결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월 18일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이 도끼로 미군을 살해한 사건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9월 21일, 유엔주재 북한 상임읍 서버대표부 권민준 대표는 8월 16일 유엔총회에 제출했던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결의안을 철회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결의안의 공동발기국들”이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그만두고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가 조속히 리행되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유엔성원국들의 의사를 고려”한 “주동적”인 “철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⁶⁵ 북한 지도부가 이미 유엔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을 철회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1970년 비동맹 정상회의가 재개되고, 1973년 알제리 정상회의 그리고 1975년 페루 리마 외상회의를 거치면서, 북한의 대(對)빨리불가담 외교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왜 북한은 1976년 콜롬보 회의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일까?

첫째 비동맹회의 주최국이 스리랑카였기 때문일 수 있다. 앞서 열린 1973년 비동맹 정상회의는 북한과 매우 가까운 알제리가 주최국이었으며 1976년 비동맹 정상회의 때까지 알제리가 관련 회의들을 의장국으로서 주도했다. 그런데 새로운 주최국 스리랑카와 관계에서 1971년 북한은 콜롬보 현지 공관을 폐쇄당한 상황이었다.⁶⁶ 앞서 살펴

봤듯이, 주최국 스리랑카가 작성한 정상회의 정치선언 초안의 한반도 관계 내용은 북한이 원하는 것과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

둘째, 비동맹 구성의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 1961년 비동맹이 발족할 당시 25개 회원국에서 1976년 86개국으로 급증했다. 이는 비동맹의 자격 기준이 점차 완화된 측면이 작용했다. 마치 초창기 유엔의 구성이 친서방적이었다가 1960년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상당수 가입함으로써 그 성격이 변화한 것과 유사한 과정이 1970년대 비동맹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1976년 8월 정일영 외교관은 “이질적 보편성이 유엔의 권력구조나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렸듯이” 비동맹도 “반서방적이고 과격한 편파주의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지 않는 징조가 “이번 콜롬보회의에서” 부터 “엿보인다”고 평가했다.⁶⁷

셋째, 비동맹 구성원이 증대함과 동시에 비동맹 내에서 남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중반 북한은 경제침체를 겪으며, 유럽으로부터 밀린 자금을 갚지 못한 부채 불이행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남한은 더욱 발전하며 국제 신용도가 높아지고 있었다.⁶⁸

5. 맺음말

본고는 남북한이 1976년 열리는 비동맹 정상회의를 앞두고 펼쳤던 외교경쟁의 구체적인 과정을 밝혔다.

25일 외교관계까지 수립한 다음 상주공관을 설치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1971년 스리랑카 극좌 학생단체의 정부 전복사건의 배후 조종혐의로 주목한 콜롬보 공관의 폐쇄 및 공관원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 8월 스리랑카 개황 08 북한과의 관계」,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lk-ko/index.do>

⁶⁷ 정일영은 외교관으로서 한일회담 대표, 외무부 차관(1964), 주 체네바 대표부(1965), 스위스·벨기에·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정일영, 「외교의 환상과 현실: UN과 비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1976.8), 『한국외교와 국제법』, 나남, 2010, 659쪽.

⁶⁸ 김승우, 「경제성장과 냉전의 체제경쟁 그리고 지구적 금융: 전후 남북한의 국제금융사」, 『역사의 창』, 54, 국사편찬위원회, 2022.

⁶⁵ 『로동신문』, 1976.09.23, 2면.

⁶⁶ 1960년 9월 북한은 스리랑카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한 이후 1970년 6월

1975년 리마 외상회의에서 비동맹 가입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가입외교전은 일단락됐으나, 1976년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선언과 결의안이 채택되느냐를 둘러싸고 남북한은 다시 한번 격돌했다. 북한은 1976년 들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북침 준비로 인한 '새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콜롬보 정상회의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경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고자 했으며 남한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제출한 한반도 관련 정치 선언 조문과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채택된 결의안에 유보를 포함한 비동맹 회원국이 약 30퍼센트에 달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비동맹그룹의 단결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콜롬보 정상회의에 제출했던 결의안과 유사한, 즉 유엔총회에 제출했던 '새 전쟁 위험'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결의안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970년대 초중반 비동맹 외교에서 승승장구하던 북한이 1976년 콜롬보 정상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첫째 주최국의 변경, 둘째 비동맹 구성원의 변화, 셋째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는 당시 남한 외무부와 친한국 성향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페루뿐 아니라 평양에 주재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작성한 당시 전문과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주최국과 비동맹 구성의 변화만으로는 바로 1년 전인 1975년 페루 리마에서 남북한의 가입을 둘러싸고 북한만 가입에 성공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1975년 비동맹 외상회의 주최국 페루는 남한하고만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또한 리마 외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은 80개국으로 76년 정상회의 때 86개국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리마 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비동맹에 가입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1년 만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30퍼센트가 자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유

보를 나타내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일까?

북한은 1947년 정부 수립 전부터 민족해방운동을 지해왔으며 비동맹 관련 민간 차원의 국제회의에도 꾸준히 참여해왔을 뿐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는 자주외교를 표방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상당히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더구나 1970년대 초중반 비동맹이 재결집하고, 사회주의로 남베트남을 패망시킨 베트남이 비동맹에 가입했듯이 비동맹은 상당히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1975년 시점에서 북한의 비동맹 가입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976년 내내 북한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앞세우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국제여론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1976년 8월 5일 북한 정부는 이례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의 핵무기 반입 등 북침 준비임을 비판하는 성명과 비망록을 발표했다. 그리고 콜롬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외상회의에서 '새 전쟁' 위기를 담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콜롬보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8월 16일,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8월 5일 북한 정부의 강경한 성명과 비망록 발표에 대해 같은 진영의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조차 "최근 지역 상황이 급격하게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중요한 요소가 등장했다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북한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과장하고 있었다.⁶⁹ 실제 "1970년대 들어선 이후 한국에 있는 미국 전술핵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⁷⁰

1970년대 초중반 급진화의 경향을 비동맹 그룹들이

69 「평양에서 부쿠레슈티로 보내는 전보(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Urgent, No. 067.190)」(1976.8.6), 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14>

70 이삼성, 『한반도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한길사, 2018, 178쪽.

보였다 할지라도, 비동맹회의는 1961년 탄생 때부터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1976년 신규 가입국 북한이 연일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내세웠으며, 심지어 비동맹 정상회의 도중에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도끼에 의한 미군 살해라는 잔혹한 장면까지 전세계에 송출됐다. 이에 비동맹 회원국들은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콜롬보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국가들의 사료에 입각하여 회의 전말을 확인해야 정확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1975년까지 비동맹 그룹 내에서 온건하거나 엄정 중립을 지켜온 국가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새 전쟁을 문제 삼는 북한의 강경한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유보 발언에 나섰던 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다수 비동맹 국가들에게 북한의 강경한 한반도 전쟁 위기 선전은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비동맹 외교를 중심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1974년부터 북미관계는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변화 양상은 1976년 북한의 비동맹 외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대(對)비동맹 외교는 한미관계의 변화 양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시기 북미관계, 한미관계를 미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규명해야만 남북한의 비동맹 외교의 성격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1976년에 한정하여 비동맹을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기 그리고 1980년대 내내 남북한 대(對)비동맹(빨리불가담) 외교경쟁은 지속됐다. 이것들은 향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문서
국제연합과,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_____,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6.5.30~6.3』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경향신문』
유엔디지털아카이브. <https://digitallibrary.un.org>
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북한 노획문서(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https://www.nl.go.kr/NL/contents/N20401010000.do>

2. 단행본 및 논문

김도민, 「1970~75년 북한의 빨리불가담(non-alignment) 인식과 활동: 빨리불가담 회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6(3),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3.
_____,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한국의 가입신청 문제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2023.
김승우, 「경제성장과 냉전의 체제경쟁 그리고 지구적 금융: 전후 남북한의 국제금융사」, 『역사의 창』, 54, 국사편찬위원회, 2022.
김태균, 『반동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진인진, 2023.
서보혁·이창희·차승주 편,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선인, 2015.
이상성, 『한반도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한길사, 2018.
이상우·정영철, 「축전외교를 통해서 본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 『현대북한연구』 27(2),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4.
최규빈, 「북한의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와 제3차 개발도상국 정상회의 참가배경과 함의: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적 활용」, 통일연구원, 2024.
최용환,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 배경과 전망」, 『이슈브리프』 54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Abstract**The 5th Non-Aligned Summit Conference(1976) and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im, Do-Mi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rrounding the 5th Non-Aligned Summit held in Colombo, Sri Lanka in 1976 in relation to the 'Korean Question'.

At the 1975 Lima Foreign Affairs Conference, the diplomatic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ver joining the Non-Aligned came to an end, but at the 1976 Non-Aligned Summit, North and South Korea once again clashed over which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n 'Korean Question' would be adopted. In 1976, North Korea emphasized the 'danger of a new wa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by the United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parations for an invasion of the North, and attempted to submit and pass a hard-line resolution containing these contents at the Colombo Summit, while South Korea attempted to block this.

The political declaration and resolution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submitted by North Korea were passed. However, with approximately 30 percent of non-aligned member states expressing reservations about the adopted resolution, North Korea failed to secure the unified support of the non-aligned group. In the en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d to withdraw the 31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at it had submitted with strong content regarding the 'Korean Question' immediately after the Colombo Summit ended.

Keywords Non-alignment,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orean Question, UN General Assembly, Global South
